광주 5개 구청장 경선 11일 실시

새정치, 기초長·지방의원 후보 선정 작업 어디까지

광주 시의원·구의원 10일 100% 공론조사로 선정

전남은 공천관리위도 구성 못해 공천작업 지지부진

새정치민주연합 지방의원(광역·기초의원)과 광주 구청장 경선이 오는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치러진다.

반면, 전남도당은 후보 마감일(5월15일~16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공천관리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어 공천이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와 함께 비난을 받고 있다.

◇광주, 경선 일정 확정=지난 30일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에 따르면 광주지역 5개 기초단체장 경선은 오는11일, 시의원 및 구의원은 10일 각각 실시하기로 했다.

구청장과 시의원, 구의원은 모두 100% 공론조사 선거인단 투표방식으로 치러진다.

시당은 이에 따라 오는 3일부터 4일까지 기초단체장 후보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한 뒤 1차 컷오프를 통해 2~3명의 후보로 압축하기로 했다.

이어 7일 경선 후보자 등록을 한 뒤 8일 공론조사 선거인단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론조사 선거인단은 외부기관이 전화면접조사 등을 통해 무작위로 추출하며, 규모는 각 구별로 유권자의 0.3% 수준이다.

기초단체장 경선은 1차 컷오프를 통과한 후보자들 간 토론을 거친 뒤 현장에서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후보를 결정하고, 13일께 중앙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천후보자를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시의원과 구의원 경선도 오는 10일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실시되며, 현재 후보들에 대한 면접이 진행중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 관계자는 "면접, 컷오프, 재심, 경선후보등록, 경선 등 15일 후보등록 신청까지 빡빡한 일정"이라며 "하루라도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면 경선 날짜가 변경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남, 민주계 의도적 경선 지연 의혹=전남도당의 경우 후보 등록을 보름여 남겨 놓은 30일 현재까지 공천관리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는 등 공천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인 민주계가 공천 작업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면서 시간적 여유를 이유로 민주계가 대부분인 현역 기초단체장에게 유리한 100% 여론조사 경선을 관철하려 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민주계 집행위원들은 지난주 새정치연합계 공동집행위원장의 자격 문제와 집행위원 2명의 당적 문제를 이유로 공천관리위 구성을 지연했고, 이번 주에는 공천관리위원 비율 문제 등을 놓고 민주계와 새정치연합계가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연합계는 15명의 공천관리위원의 배정을 양측이 ▲8대7로 구성하되 7을 갖는 측이 위원장을 하는 방안 ▲7대7로 구성하되 나머지 한 명은 양측이 합의한 민주계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방안 ▲7대7로 구성하되 나머지 한 명은 의결권이 없는 민주계 위원장을 내세우는 방안 등 세 가지 안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계는 세 번째 안으로 하되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후보 등록일 이전까지 22개 기초단체장 및 도의원, 군의원 후보들이 확정될지 의문시되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는 2일께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 또는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세월호 실종자 귀환 기원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 디자인 동아리반 30여명이 지난 30일 북구 망월동 광주동초등학교를 찾아 임시가건물 외벽에 초등학생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다. 앞서 동초등학교 전교생은 세월호 실종자의 귀환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노란리본을 교내 곳곳에 붙였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자치단체 '재정영향평가' 있어야

대규모 국제행사·공모사업 추진

안행부, 지방재정법 개정

앞으로 자치단체가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하려면 재정영향평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새 법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새 지방재정법을 보면 대규모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국제행사와 공모사업 등은 신청 전에 평가·심의를 받도록 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제'가 도입된다.

특히 500억원 이상 사업은 안행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받게 했다. 자치단체의 모든 부채는 통합 관리되는 체제로 전환된다.

개별 관리해 온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부채 뿐 아니라 보증 등에 따른 우발부채까지도 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의 관리기준은 현금주의 채무(2012년 27.1조)에서 발생주의에 의한 부채(2012년 43.4조)로 바뀐다.

아울러 보조금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민간단체 지원 같은 지방보조금의 대상자 선정부터 사후 평가와 취소·반환 등을 관리하는 기준이 신설·강화되고 전체 국고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점검하는 이력관리제가 새로 도입된다. 정보공개 등 투명성 제고 방안도 새 법에 담겼다.

재정공시 항목에 통합부채, 우발부채, 투자심사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포함시키는 한편 지자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지방교육재정 통계를 종합적으로 작성(지역통합재정 통계))하고 공개함으로써 주민이 지역 전체의 재정상황을 보다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안행부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 건전성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현재 고2부터 전문대 특별전형 7개로 간소화

세월호 피해학생 사배자 포함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16학년도부터 전문대학의 정원 내 특별전형이 7개로 간소화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는 전문대학 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2016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30일 발표했다. 전문대학은 일반·특별 전형의 모집인원 비율이 57대 43으로 특별전형의 모집 비율이 높은 편이다.

전문대교협은 활성화되지 않은 전형은 축소·폐지하고 유사한 전형을 통합해 ▲일반과정 졸업자 ▲전문(직업)과정 졸업자 ▲연계교육 대상자 ▲추천자 ▲특기자 ▲관련 경력자 ▲사회·지역 배려 대상자 등 최대 7개로 간소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와 같은 국가재난 피해학생의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지역 배려 대상자에 재난지역 피해학교 출신자를 포함했다. 전문대교협은 가급적 동일한 전형에서 전형요소와 반영비율을 같게 설정하도록 하고, 수시 모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를 최저학력 기준으로 반영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권장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도 발전계획을 두달만에 작성하라고?

청와대 직속 지발위, 일방적 통보에 졸속 추진 논란

청와대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오는 2018년까지 지역 발전 전략을 담은 '전라남도 발전계획'을 두 달만에 작성해 제출해줄 것을 통보하면서 졸속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규정된 법정계획인 '전라남도 발전계획'은 전남도가 그동안 수립한 모든 계획을 포괄하는 최상위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난 30일 "지역위가 다음달까지 전라남도 발전계획에 대한 생활권발전협의회 검토·심의, 자문 의견 반영 작성 및 검토를 마치고 수정안을 제출해줄 것을 통보해 와 계획서 작성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지역위의 이 같은 '독촉'에 지난달 국비 7500만원을 지원받아 '전라남도 발전계획' 작성을 전남발전연구원에 발주한 바 있다.

'전라남도 발전계획'에는 오는 2018년까지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 지역산업발전종합계획,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 관광개발계획 등 전남도의 발전 방안과 관련된 모든 계획이 포함된다. 또 지역생활권 구성 현황 및 생활권사업,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과 함께 일자리·경제, 교육, 문화·생태, 복지·의료분야 등에 대한 구상도 들어가야 한다.

이처럼 '전라남도 발전계획'의 양이 방대한데다 계획 집행기간과 임기가 겹치는 후임 도지사의 의중을 반영하는 등 지역 내 의견 수렴 과정도 필요하다고 판단, 도가 지역위에 제출 시기 연기를 건의했으나 묵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무등산국립공원 '무돌길 탐방객' 순환버스 3일부터 운행

무등산국립공원 내 옛길과 무등산을 한 바퀴 도는 '무돌길 탐방객'을 위한 무등산 순환버스가 3일부터 운행된다.

광주시는 "11월30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9시, 오후 1시 두 차례에 걸쳐 무등산 순환버스를 운행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광주역에서 출발해 호수생태원~담양 남면~화순이서~증심사주자창을 거쳐 광주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2시간30분 정도 소요된다.

시는 또 3일부터 무등산 등산 후 화순(이서) 등으로 내려오는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화순읍에서 이서를 오가는 탐방지원 버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순환버스는 비수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운행이 중단된다. 순환버스 이용 문의는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061-371-1187)로 하면 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